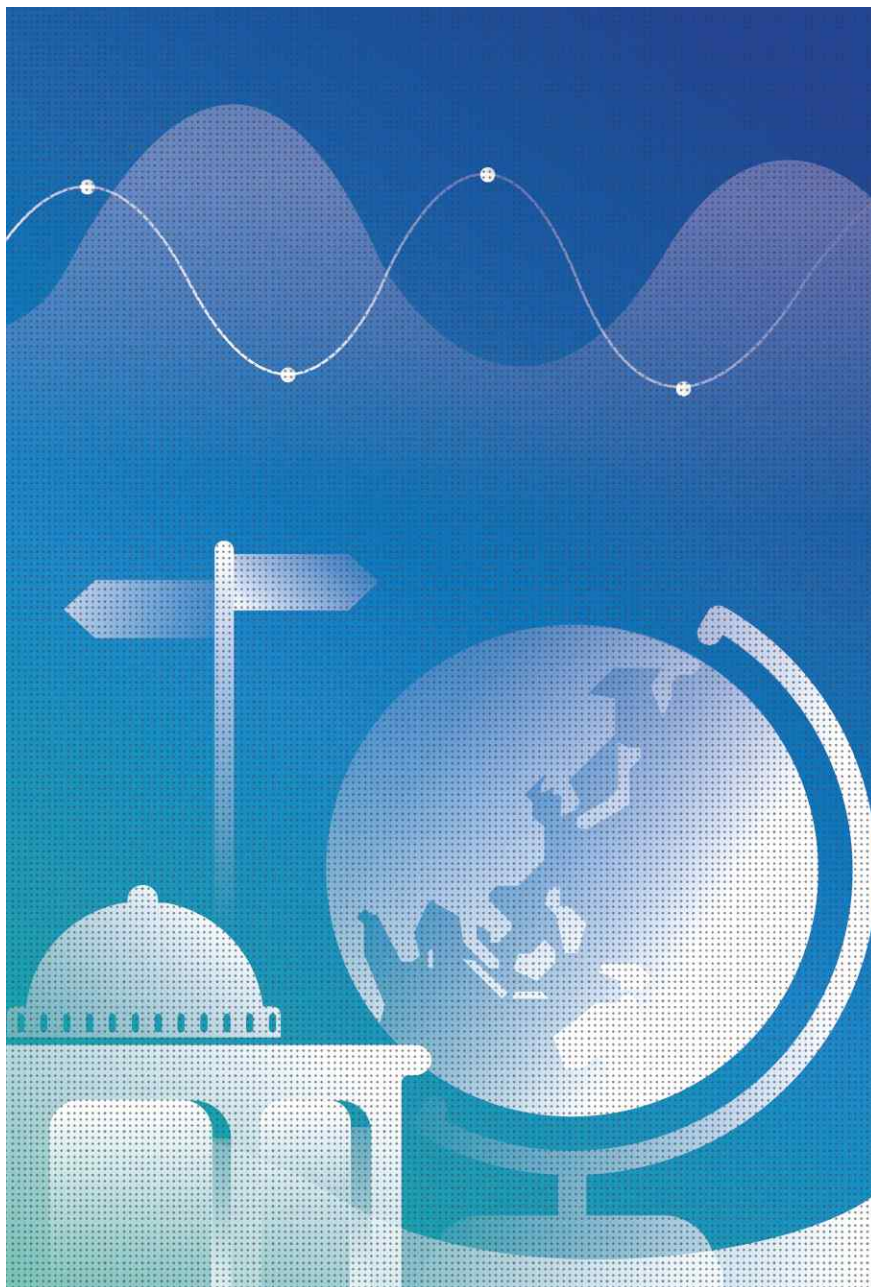


#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4(2021.06)

##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배경과 현황



### CONTENTS

- I. 양안 관계: 역사적 배경과 변화의 흐름
- II. 미국과 대만: 비공식적 우호 관계
- III. 최근 대만을 둘러싼 갈등 고조의 배경과 현황
- IV. 전망 및 시사점

### 작성

책임조사역 이주은 (6252-3599)

June@koreaexim.go.kr



## I. 양안 관계: 역사적 배경과 변화의 흐름

### 중화민국의 대만 이주와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1945년 9월 2일 중일전쟁의 종전 후 국민당과 공산당 진영 간 벌어진 전면적 내전(국공내전)에서 패퇴한 국민당은 1949년 대만으로 철수하며 난징에 있던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중국 본토에서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음.
- 대만해협을 기준으로 서안(대륙)과 동안(대만)으로 마주 보는 지리적 위치에 기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관계를 '양안 관계'라 칭함.
- 대만<sup>1)</sup> 정부는 1912년 중국 본토에서 수립된 공화정 국가인 중화민국을 계승하였음을 자부하며, 그 주권이 대만 본섬 및 주변 도서에 미치는 국가로서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독립된 정부라는 입장임<sup>2)</sup>.
-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대만 지역과 중국 본토에 자리잡은 후에도 상당 기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1954년 및 1958년 대만 진먼섬에 인민해방군이 대규모 포격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각각 1차 및 2차 대만해협 위기로 불림. 2차 위기 이후에도 진먼섬을 대상으로 한 인민해방군의 포탄 공격 등 군사적 위협이 장기간 계속되었으며, 1979년 중국에서 평화 통일의 염원을 내세워 포격 중단 명령을 내린 뒤로 관련 전투가 중단되었음.

### 국제사회에서 중국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권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 인정

- 정부 수립 초기에는 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을 대표해 온 장제스의 국민당이 집권한 대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음. 그러나 중국 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력이 향상되고 냉전이 종식되는 등 세계 정세가 변화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권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됨.
- 대만 정부는 중국 최초의 공화정인 중화민국의 정통을 계승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1971년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대표권 귀속 문제를 담은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UN 상임이사국이 되고 대만은 해당 총회 직전 UN을 탈퇴하였음. 이후 대만은 그간 가입했던 모든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주권국가로서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제행사 등에서 공식 명칭인 Republic of China(Taiwan) 대신 Chinese Taipei 또는 Taiwan province of China 등 중국의 영토로 지칭됨.
- 중국<sup>3)</sup> 정부는 외교력을 강화시키며 꾸준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력히 견지하여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는 대만과 단교하도록 하였음. 대만의 최대 우방이었던 미국도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는 단교하였음.
- \* 하나의 중국: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

1) 1949년 대만으로 이전한 중화민국 정부를 이하 '대만'이라 칭함.

2) 중화민국 정부 홈페이지(taiwan.gov.tw)

3) 중화인민공화국을 이하 '중국'이라 칭하며, 이전까지 소제목을 제외한 본문의 '중국'은 중국 지역을 의미함.



## 대만 국민당 일당독재 시기 양안 관계는 갈등 지속, 중국과 대만 모두 통일을 지향

- 대만에서는 국공내전 시절 발효된 계엄령이 1987년까지 유지되며 국민당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통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 이 기간 중 반중 감정이 매우 강했고 양안 교류는 단절되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집권당인 국민당 위주로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 할 영토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기조가 유지되었음.
- 1979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대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여 평화적 통일 방침을 천명하였음. 이 담화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대만의 상황을 존중하고 대만 주민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혔음.
- 1992년 중국과 대만의 정치 지도자들은 민간단체인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를 내세워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한다'는 92컨센서스에 합의하였음. 중국 정부는 대만 독립 반대와 함께 92컨센서스를 양안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견지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92컨센서스를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조국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각자 해석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대만을 곧 하나의 중국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임<sup>4)</sup>.

## 대만 민주화 이후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양안 관계 개선

- 1988년 총통에 취임한 리덩후이는 언론 통제를 폐지하고 다당제와 입법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화를 진행시켜 마침내 1996년 대만 최초의 총통 선거가 실시되었음. 리덩후이는 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2000년까지 총 12년 간 총통으로 재임하였는데, 정치활동 기간 중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 '대만 독립의 아버지'라 불림.
- 중국은 1996년 3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독립 성향인 리덩후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미사일 실험, 접경 지역 대규모 군 배치 등을 강행하여 '3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미국이 무력 개입을 시사함에 따라 중국군이 물러나며 전쟁 위협이 해소되었음. 이 사태는 대만인들에게 공포보다는 분노를 조장하여 오히려 리덩후이의 득표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됨.
- 2000년 5월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수이벤이 총통으로 취임하며 약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음. 그는 2002년 8월 대만 공식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 서안과 동안에 각각 하나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등 대만 독립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중국의 위협, 범여권 의석이 과반수에 못 미치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2005년 2월 본인의 임기 동안 대만 독립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 민진당은 강령으로 '대만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어 민진당 집권시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음. 국민당은 중국과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홍콩식 일국양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민진당은 대만이 주권국가로서 독립할 것을 지향함.
- 중국은 천수이벤 정권의 독립 추진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여 2005년 3월 전인대에서 반분열국가법을 제정,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경우 군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 법 8조는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대만 분리를 야기하는 행동을 하거나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중대한

4) Why China-Taiwan Relations Are So Ten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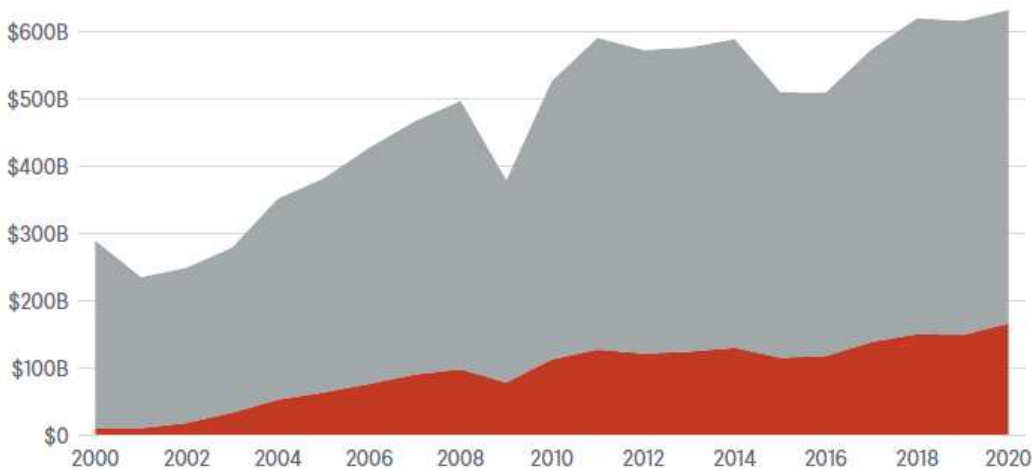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평화적 방식' 및 다른 필요 조치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한다고 규정함.

- 2008년 5월 취임한 국민당 마잉주 총통은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여 92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음. 2009년 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 허용, 2010년 중국-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이어 2015년에는 최초로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마잉주 총통이 재임한 2008~16년 중 양안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음.
- 2020년 기준 대만의 무역상대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3%로 1위이며, 대만의 해외투자 중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금액은 59억 달러로 전체 118억 달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그림 1> 대만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회색음영: 전체 무역, 붉은음영: 중국과의 무역



자료: Why China-Taiwan Relations Are So Ten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0 2021(원자료: 대만 재무부)

### 대만의 독립 지향성 강화와 양안 관계 갈등 확대

-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고, 입법원에서도 민진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처음으로 민진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였음.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독립을 명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으나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에 대하여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대만 중심의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탈중국화 경향을 나타냈으며, 2019년에는 '반침투법'을 제정하여 중국의 자금이나 지시를 받고 대만 정치에 개입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 대만에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강화하여 2016년 3월 감비아를 시작으로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7개국과 새로 수교하였음. 이들이 대만과 단교함에 따라 대만의 수교국은 15개국으로 축소되었으며,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요청이 거부되는 등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음.
-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월 '대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내정 사안임을 강조하고,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최선의 방식이나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





-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은 경기 침체에 더해 중국과의 갈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국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재선 실패가 예상되었음. 그러나 2019년 하반기 홍콩 시위가 대만 일반 대중들에게 중국으로의 흡수 통일에 대한 위협성을 각성하게 하며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이 2020년 총통 선거 및 입법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대만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며 2020년 총통 선거에 전체 유권자의 74.9%가 참여(2016년 66.3%)하였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57.1%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
- 중국은 일관되게 조국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 후에도 대만이 장기간에 걸쳐 현재의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일국양제를 제시해 왔음. 그러나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 개정이 무리하게 추진되자 이 개정안이 반중국 성향의 홍콩인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으며, 대만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반중 정서가 확대되었음. 차이잉원 총통은 당시 SNS를 통해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와 민주주의 연대의사 등을 수 차례 표현하였으며, 선거 유세에서 홍콩 사태를 거론하면서 일국양제를 수용할 경우 민주와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2020년 대만 국립정치대학이 실시한 시민의식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거주자 중 자신을 대만인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의 비중은 64%, 대만인이자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중은 30%로 나타났으며 자신을 중국인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의 비중은 3%에 불과해 1994년 조사에서 26%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또한 통일 지향(가능한 빨리 통일 / 현황을 유지하며 통일 지향) 응답자의 비중은 7.5%(1994년 20.0%), 독립 지향(현황을 유지하며 독립 추구/가능한 빨리 독립)은 35.4%(1994년 11.1%)로 독립적인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1> 양안 관계 주요 사건 일지

시기	주요 내용
1954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진먼섬 포격(1차 대만해협 위기)
1958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진먼섬 포격(2차 대만해협 위기)
1971년	UN에서 대만 탈퇴, 중국은 가입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
1979년	중국 전인대 '대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 조국 평화통일 지침 명시
1992년	92컨센서스 수립(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명칭은 각자에 맡긴다)
1996년	중국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발사 실험 및 군사 배치 등 전쟁 위협(3차 대만해협 위기) 대만 첫 총통 선거 실시: 국민당 리덩후이 총통 당선
2000년	민진당 천수이벤 총통 취임(~2008년), 일변일국론 제창
2005년	천수이벤 총통 임기 내 대만 독립 추진 포기 선언 중국 반국가분열법 제정(대만의 독립 추진시 군사 동원 근거 마련)
2008년	국민당 마잉주 총통 취임(~2016년), 중국과 우호적 관계 수립
2009년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및 민진당 과반 의석 차지
2019년	중국 시진핑 주석, 양안 통일 당위성 강조 및 필요시 무력 사용 의지 시사
2020년	차이잉원 총통 재선 승리

자료: 언론 종합



## II. 미국과 대만: 비공식적 우호 관계

###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중요

- 대만은 동북아 및 동남아의 해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해상 운송과 군사 안보의 요충지로, 중국의 군사 방어선인 제1열도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불침항모(不沈航母)'의 역할을 함.
- \* 열도선(island chain): 중국의 군사 전략상 물자 전개의 목표선이자 미국에 대응하는 방어선으로, 제1열도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며, 제2열도선은 일본 이즈 제도·사이판·괌·인도네시아를 연결함.
- 미국은 냉전 시기부터 미·중 패권 경쟁의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대만 방어가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사시 대만을 방어할 군사적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대만과의 구체적 관계는 대 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음.

<그림 2>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



자료: Strategic Rivalry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May 2020



-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는 경우 문제 해결에 개입해 왔음. 1954년 1차 대만 해협 위기 발발 한 달 뒤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 2차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에는 항공모함 6척을 보내 인민해방군의 대만 점령 시도를 방지하였음. 또한 1996년 3차 대만해협 위기 시 양안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은 아시아에서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미군 병력인 2개 향모전단을 인근에 파견하여 중국이 물러나도록 하였음.
- 다만, 3차 대만해협 당시까지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여 개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비치는 것으로도 중국의 무력 충돌을 억지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군사력이 크게 증강하여 현재는 이러한 전략이 여전히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임.

###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수용하고 대만과는 비공식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 미국은 1972년, 1978년, 1982년 발표한 세 차례의 미·중 공동선언문(코뮌니케)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임.
-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 저우언라이와 회담한 결과를 담은 '상하이 코뮌니케'에서 양국은 관계 정상화, 평화원칙 적용 등에 의견 일치를 보였으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처음 언급되었음.
- 1978년 12월 미·중이 동시에 발표하고 1979년 1월 1일 정식 발효한 '미·중 수교 코뮌니케'에서는 미국과 대만의 단교, 대만에서 미군과 군사시설 철수, 미국과 대만이 맺은 조약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음.
- 또한, 중국이 이의를 제기해 온 미국의 대만 앞 무기 공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1982년 8월 양국은 세 번째 코뮌니케를 발표하였음. 여기에는 미국의 대만 앞 무기 공여 삭감 방침, 중국의 대만 문제 평화적 해결 방침 등이 명시되었음.
-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상호방위조약 등 그간 맺은 조약들도 폐지하였음. 다만, 미국은 중국과 수교 후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문화적 관계 및 무기 판매 등 기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근거 법령으로 1979년 4월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였음.
- 대만관계법은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 이익과 관련되며 국제적 관심사라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제공, 미국에 존재하는 자산에 관한 소유권 및 당사자 적격의 승인 등을 규정하였음.
- 또한 민간단체인 AIT(American Institute in Taiwan)를 설립하고 AIT가 대만과의 교류를 주관하도록 해 교류를 비공식화하였음. 미국 공무원이 AIT 근무시 복직을 보장받은 채로 민간인 신분을 가지게 됨.
- 1982년 레이건 정부는 세 번째 미·중 코뮌니케 발표를 앞두고 대만에 대하여 무기 판매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수립하였음.
- 6대 보장 내용: ①미국은 대만 앞 무기 판매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②미국은 대만 앞 무기 판매에 관하여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 ③미국은 대만과 중국 간에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④미국은 대만관계법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⑤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⑥미국은 대만에 중국과 협상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대만과 비공식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왔음. 또한 대만과 중국의 무력 충돌시 대만 앞 군사지원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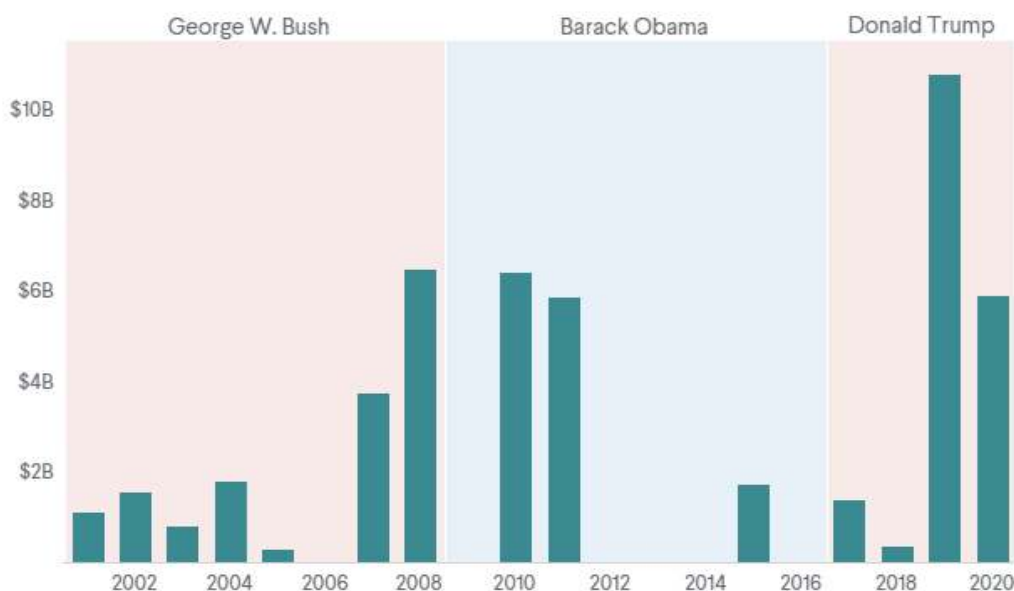


표명을 거부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만이 선불리 독립을 선언하지 않도록 하였음. 미국의 중국 및 대만 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음<sup>5)</sup>.

###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갈등 확대와 대만 정책 변화

- 미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대만에 대해서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취해 온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대만 앞 무기 판매도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중국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등 미·중 및 양안 관계 갈등이 점차 격화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인 2016년 12월 2일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하였는데 이는 1979년 단교 이후 미국-대만 정상 간 첫 대화임.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보건부 장관, 국무부 경제 차관 등이 대만을 방문하였으며, 장관급인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었음.
-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이후 대만을 활용한 대 중국 압박이 본격화하면서 2019년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는 대만을 관계를 강화해야 할 '국가'로 명시하였으며,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만에 F-16V 전투기, M1A2T 전차 등 신무기를 대량 판매하는 등 대만 앞 무기 판매액이 집권 중 180억 달러를 상회하여 이전 정부들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음. 또한 무기 판매 외에 미국 해군 전함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대만해협을 수시로 통과하여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과시하기도 하였음.
- 2021년 1월 9일, 미 국무부는 미국의 공직자들이 대만 공직자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던 내부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직후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와 대만 대표가 공식 회동하였음. 이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대만과 공식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였음.

<그림 3> 미국의 대만 앞 무기 판매액 추이(2001~20년)



자료: Why China-Taiwan Relations Are So Ten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0 2021(원자료: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5) Why China-Taiwan Relations Are So Ten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y 10 2021





### Ⅲ. 최근 대만을 둘러싼 갈등 고조의 배경과 현황

#### 대만의 탈중국화 기조와 미·중 갈등 격화라는 대내외적 요인이 맞물려 양안 갈등 확대

- 대만에서는 국공내전 당시 중국 본토에서 이주해 온 세대가 정치·사회 현역에서 물러나고 대만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만인이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 되었으며,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가 공고히 정착함\*에 따라 중국과의 일체감이나 통일에 공감대가 희박해진 상태임. 다만, 현실적으로 대만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력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당장 독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실상 중국과 별개 국가인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함.
  - \* EIU에서 2021.2월 발표한 Democracy Index 2020에서 대만은 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세계 민주주의 순위 11위를 차지하였음.
- 대만 내적으로 보면 이러한 독립적 정체성의 강화가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가시화된 탈중국화 기조가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임.
- 2021년 1월 출범한 미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트럼프 정부와 정책 방향이 다르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는 이어나가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국교 단절 이후 최초로 주미 대만 대표를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정부가 임기 말에 미국 공직자들이 제한 없이 대만 공직자를 만나도록 한 조치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대 중국 압박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였음.
-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대만 대표가 참석하자 중국은 23~24일에 걸쳐 총 28대의 전투기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시켰으며, 이에 미 정부는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하였음.
  - \* 방공식별구역(ADIZ):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공은 아니지만 이 구역에 다른 국가의 군용기가 진입할 경우 사전 통보가 필요함(미국 연방항공청).
-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 관련한 3대 원칙으로 미·중 간 체결한 3개 코뮌িকে, 대만 관계법 및 6대 보장을 제시하였음. 대만 정책 원칙 중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중 코뮌িকে를 포함시킨 것은 미국이 중국과 전면 충돌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표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 3대 원칙

구분	시기	주요 내용
미·중 코뮌িকে	1972년	양국 관계 정상화 추진, 미국이 최초로 '하나의 중국' 인정
	1978년	양국 수교, 미국과 대만의 단교
	1982년	미국의 대만 앞 무기 판매 삭감, 중국의 평화로운 대만 정책
대만관계법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비공식적 관계 유지와 무기 판매를 위한 근거 마련
6대 보장	1982년	미국의 대만 앞 무기 판매 종료 기한 불특정, 대만관계법 변동없이 유지

자료: 언론 종합



##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만의 국제적 입지 강화와 대만해협 긴장 고조

- 2021년 4월 전직 상원의원·관료로 이뤄진 비공식 사절단이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6월에는 현직 상원 의원 3명이 군 전략 수송기를 이용해 대만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약속하고 차이잉원 총통과 접견하였음. 이외에도 팔라우 주재 미 대사가 미국-대만 수교 단절 후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등 행정부 교체 후에도 미국-대만 고위급 교류 확대와 관계의 공식성 제고라는 대만 정책의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음.
- 3월 28일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에 동행함으로써 1979년 미국-대만 수교 단절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사의 대만 방문이 이루어졌음.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며 미국과 대만 간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하였으며, 29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 10대가 진입하여 무력시위를 벌였음.
- 6월 6일 태미 덕워스 등 현직 미 상원의원 3명이 백신 지원을 약속한다는 명목으로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에서는 백신 제공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가능한 문제로 미 상원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대만과의 관계를 점차 공식화시켜 '하나의 중국'을 무력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도발이라고 논평하였음.
-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그간 백신 확보가 늦어진 가운데 중국산 백신 제공을 수용하라는 중국 당국과 친중 세력의 압박에 고심 중이던 대만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태미 덕워스 의원은 방역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며, 미국이 대만을 첫 백신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발언하였음.
  - \* 대만 위생복지부는 2020년 말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주문 계약이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다며, 정치적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였음. 이는 중국 상하이 푸싱제약이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의 중국-대만 유통권을 가지고 있다는 배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미국은 직접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외에도, 우방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지지하여 대만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바이든 출범 이후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현장에서 공동성명에 대만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음.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인지하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언급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므로, 이처럼 주요 외교 무대에서 대만이 연달아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4월 16일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국제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와 대만 지지 의사가 드러났음.
-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미·중 갈등 현안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했음. 다만, 중국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고 지역 다자주의를 언급하는 등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였음.
- 6월 12일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였으며, 대만은 이에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중국은 6월 15일에 역대 최다 규모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음.
- 미국과 대만은 트럼프 정부 시절 논의가 중단됐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6월 30일 11차 협상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음.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로 평가되며, 중국 외교부에서는 중국과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적 성격의 협정을 체결하는 데 반대한다고 반발하였음.



<표 3>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대만 관련 주요 사건

시기	주요 내용
1. 20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주미 대만 대표 참석(1979년 단교 후 최초)
1. 23~24	중국 군용기 대만 방공식별구역 이틀 연속 진입
2.4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2.11	바이든, 시진핑과 취임 후 첫 통화에서 대만 문제 언급
3.28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 대만 방문(1979년 단교 후 최초의 미국 대사 대만 방문)
4.13	미국, 전직 상원의원과 고위관료 등 3명의 비공식 대표단 대만 파견
4.16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명기
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대만 첫 언급
6.6	미국 현직 상원의원 3명, 군 수송기를 이용하여 대만 방문 및 백신 지원 약속
6.9	중국, 대만 인근에서 상륙함과 장갑차를 동원해 수륙 양면 작전훈련 실시
6.10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 재개 합의
6.12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처음 언급
6.15	중국 군용기 역대 최대 규모로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28대)

자료: 언론 종합

- 한편,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중요성 외에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특히 애플 등 다수 미국 기업의 주요 공급업체인 TSMC를 보유하여 경제·산업 전략 면에서 그 중요도가 상승하였음. 파운드리 시장 매출액에서 대만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함.
  - TSMC는 삼성전자와 함께 현재 가장 발전된 반도체 칩(5nm)을 생산할 수 있는 단 둘뿐인 파운드리 기업으로, 2020년 기준 세계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54%를 차지함. TSMC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 주요 IT 기업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며 전 세계 스마트폰 프로세서 부품의 대부분과 자동차용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최대 60%<sup>6)</sup>를 공급하고 있음. TSMC의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금액, 반도체 시장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독과점 체제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주요 기업들의 위탁 생산도 맡아왔으나 2020년 미국 정부가 화웨이 앞 반도체 공급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미국의 반도체 공급능력 강화 정책에 호응하여 애리조나 주에 120억 달러(약 13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 6월 생산공장 건설을 착공하였음.
  - 미국에서는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반도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6월 8일 상원을 통과한 '미국 혁신 경쟁법'은 반도체 분야에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같은 날 백악관이 발표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 및 광범위한 성장 촉진' 보고서에서 반도체는 모든 사업의 필수재로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산업이라고 강조하였음. 이처럼 산업 안보 관점에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6) IHS Markit 조사에 따르면 TSMC는 전 세계 마이크로컨트롤러의 60%, TSMC의 자체 발표에 따르면 35%를 공급함. (자료: The World Relies on One Chip Maker in Taiwan, Leaving Everyone Vulnerable, Wall Street Journal, June 19 2021)



## IV. 전망 및 시사점

### 중국-대만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 상태 유지 전망이 우세

- 중국이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가운데 양안 관계가 지속 악화 하면서,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더 나아가 미·중 충돌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가지는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대규모 상륙 작전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군사적 부담, 홍콩·티베트·신장 위구르 등 다양한 내정 현안, 미국의 개입 가능성,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관리, 양안 관계의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 시 근시일 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지난 2월 이임을 앞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은 의회 청문회에서 향후 6년 내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6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고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가까운 장래에 침공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 다만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의 강경함과 시기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무력시위나 위협 발언을 보다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큼.
-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강화와 중국의 전쟁 위협 등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첨단무기 판매 등을 통해 대만이 방위 능력을 보강하도록 지원하고, 미 해군 전함의 대만해협 정기 항행을 통해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잡힌 대처와 산업 경쟁력 지원 필요

-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언급되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 하였으며, 6월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할 때 한국 오산 기지에서 군용기를 이용하는 등 우리나라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연루되지 않고자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 특히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것에 대비해야 함.
- 또한, 정치적 상황 뿐 아니라 대만이 미국과 TIFA 협상을 재개하고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역시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